소비자 원성 높자 정부-업계 '네 탓'공방

■ 정 부

세금 1.2% 오른 동안
정제마진 59% 늘어
정유사 지나친 폭리 탓

■ 정유사

역마진 중유 빼고 산출
정부가 꼼수 부리는 것
급등 원인은 세금 탓

정부와 업계, 소비자간에 기름값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일 "세금 인하 불가"를 외치고 있고, 정유업계는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기름값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차량 운행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기름값 폭탄 원흉, 세금인가 정유사 폭리인가= 한국석유공사가 전국의 98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천554.04원으로 17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는 ℓ당 1천249.45원으로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1천300.22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달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에너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국제 유류제품 가격이 조금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전망이다.

기름값 폭등에는 원유나 석유제품 가격의 급등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론은 "국제가격이 올랐다지만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국내 가격이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없다"는 데로 모아진다.

일단 정부측은 국내 유류세가 높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중 세금(부가가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의 비중이 57.7%(지난해 3·4분기 기준)로 프랑스(67.3%), 독일(64.7%)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1일 휘발유·경유 수입시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사이 유류세는 1.2% 올랐지만 정유사들의 정제마진(휘발유가-원유도입가)은 같은 기간 59%나 늘었다는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정제마진 산출에는 휘발유 한 제품 뿐 아니라 경유·등유·중유·벙커C유 등도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정부가 역마진이 발생하는 중유 등은 빼고 휘발유만으로 정제마진을 산출해 정유사들의 폭리가 국내 휘발유가 급등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높은 휘발유값의 원인을 과도한 세금에서 찾고 있다. 지난 8일 국내 유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열린 산자부와 정유업계의 간담회에서도 정유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거두고 있는 유류세금 전반의 인하를 요청, 높은 기름값은 세금이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기 세금인하, 중장기 경쟁 필요= 정부와 업계의 '네 탓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시장구조상 과도하게 비싼 국내 석유제품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인하와 시장의 경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수요가 급증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다.

산업연구원(KIET)이 2003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 변동폭과 수요 변동폭을 견줘보는 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이 휘발유는 0.167~0.209, 경유는 0.240~0.244로 기준치 1에 크게 미달했고 이를 장기간으로 분석해보면 휘발유는 0.061~0.079, 경유는 0.079~0.093으로 크게 낮아졌다.

세금 부담을 줄여 기름값이 조금 내려도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요 문제보다 세수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지난 한해 유류관련 세금으로만 26조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돼 정부가 손쉬운 세금 거두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금이 높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도 타당한 것은 아니다. IE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중 유류세 비중은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일본(40.9%)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연합뉴스

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자격심사

비금융 주력자 가능성 여부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요구

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는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정기 심사이지만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특히 론스타에는 동일인(본인과 특수 관계인)과 이들에 대한 지분 현황, 자산·자본 총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에는 6개의 펀드가 있고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주"라며 "이들 6개 펀드의 초기 투자액만 단순 합산해도 13조원을 넘고 주된 투자 내용으로 회사 인수·합병, 부동산 관련 투자 등이 언급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론스타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도 금감위가 그동안 1개 펀드(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SCA'가 속한 론스타 펀드Ⅳ)에 속한 회사 만을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보고 해당 자료만을 검토해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변호사 등 25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변호사와 의사, 사업 · 운송용 조종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와 의사, 사업용 조종사 등 25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이다.

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의 직업에 종사하고 상위 25% 이상의 연봉(약 6천900만원)을 받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도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합뉴스

자동차 1대당 세금 183만원

작년 총 세수의 16.7%

지난해 자동차 1대에 부과된 평균세금이 183만원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관련 세수총액은 29조원으로 국가 총 세수의 16.7%에 달했다.

1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내놓은 '2006년도 자동차 관련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천589만5천대의 등록차량에 부과된 세금은 29조93억원으로 차 1대당 183만원을 기록했다.

작년의 차 1대당 세금은 2005년의 169만원보다 14만원(8.3%), 2004년보다는 23만원 늘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취득단계의 자동차 1대당 세금은 37만3천원으로 전년(32만원)대비 16.6% 증가했다. 취득단계 세금의 증가폭이 특히 컸던 것은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2004년 3월~2005년 말)으로 인하된 특별소비세의 환원과 수입차의 판매증가 때문이다.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은 7~9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자동차세 교육세(승용차만 적용) 부과로 대당 17만5천원으로 7.4%(2005년 16만3천원) 높아졌다.

세부담이 가장 큰 운행단계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행세 인상으로 세금이 127만7천원으로 5.9% 늘었다.

작년 7월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는 작년 7월 ℓ당 323원에서 351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4.0% 에서 26.5%로 각각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는 2005년(25조 9,879억원)대비 11.6% 증가했고 국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보다 0.1% 포인트 늘어난 16.7%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 발족

12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증시 조정국면 주도주 바뀌나

상승장 이끈 조선·기계·철강주 약세에
전문가들 "IT·차·금융주 하반기 회복"

최근 시장이 조정양상을 보이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조선·기계·철강업종이 약세를 면치 못한데 반해 전기전자(IT)와 자동차, 금융 등 이른바 '소외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몰리자 주도주 변화를 점치는 증시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적 추정치 등을 감안, 기존 주도업종의 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연 이틀 2.09% 하락하며 조정을 보인 코스피지수는 12일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중국증시의 상승 등에 힘입어 13.32포인트(0.78%) 오른 1,729.88로 마감했다.

이날 상승은 기존 주도주인 조선업종 등이 이끌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2.97%와 2.55% 올랐으나 최근 급등했던 현대차는 -0.14%,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따라 향후 주도주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증권 안태강 연구위원은 "조선, 기계 업종의 주도주들이 큰 하락을 보인 것은 이들 업종이 다시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이전만큼의 강도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현시점은 조정장에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향후 반등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 또한 높은 IT와 자동차, 금융업종의 비중확대를 실천할 시기"라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 이현주 애널리스트는 "IT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메모리업체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D램 가격이 최악의 국면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IT의 상승은 단순 소외주의 반등성격을 넘어 하반기 성장성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신증권 곽병열 애널리스트는 이날 시황보고서를 통해 "올해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를 보면 조선, 운수장비, 보험, 기계업종 등의 연간실적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종목별로 실적 전망치에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주도업종의 강세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韓銀총재, 금리인상 재차 시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높은 유동성 증가세가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통화지표의 움직임에 한층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유동성 증가세가 가파르게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으로 유동성 흡수에 나설 수도 있음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57주년 기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적인 대출확대 등 쏠림현상이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 비엔날레 휴대폰 결제로 입장

10월부터 전자 서비스

오는 10월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의 입장권을 휴대전화로 예약하면 바코드 형태의 입장권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전자결제(u-Payment) 활성화를 위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차세대 전자결제를 확산할 수 있는 u-Payment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u-Payment란 유비쿼터스 기술을 지급결제 단계에 적용해 다양한 기기/수단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제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통부는 이번 u-Payment 시범사업 과제 공모 결과 6개의 과제가 접수돼 이중 문화재청과 ㈜씨스퀘어소프트 컨소시엄, 광주광역시와 SK C&C 컨소시엄 등의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3세대 이동통신의 USIM카드를 활용해 입장권을 무선으로 발급, 종이 티켓없이 문화시설에 입장 가능한 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와 SK C&C 컨소시엄은 납세자가 휴대전화로 공과금 및 세금 납부를 신청하면 SMS(단문메시지)로 고지서를 전송하고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광주 비엔날레(10월5일-11월3일) 입장권을 휴대전화로 예약하면 바코드 형태의 입장권과 함께 광주 비엔날레 작품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콘도회원권 사기 주의보

소보원 피해 964건 접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9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1건)에 비해 256%(693건)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철회 거부, 과다 위약금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3%(80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시 제공한 무료통화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경품 당첨이나 보험료 환급을 빙자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각각 6.95%(67건)였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콘도가 계약전 설명과 달리 제한돼 있는 경우는 0.7%(7건)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5,900만원짜리 TV

삼성전자가 12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LCD 70인치 TV를 선보이고 있다. 판매가는 5천900만원이며 100명에게 한정판매될 예정이다. /연합뉴스